

‘권성동 체포동의안·더 센 특검법’ 野 불참 속 본회의 통과

與 “권성동, 도주 우려에 구속 필요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 기부 받아”

與野 원내대표, 3대특검 수정 합의에
정청래, 재합의 지시… 당내 갈등 보여
李 대통령, 與野 합의 ‘부정적’ 입장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기표한 후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는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시위에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거대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으로는 통합의 정치로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야당을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표리부동한 정치

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갈등을 드러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0일) 민주당이 3대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특검법 기간 및 규

모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합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연장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 여야 합의를 두고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사실상 여야 합의는 결렬됐고,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중 끝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연장법안을 두고) 여야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와 의원총회 과정에서 수정안 도출 과정이 있었는데,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대해 당 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의원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하셨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3대 특검 연장법안은 기간과 수사 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확대안으로 하고 ▲특검의 군검찰 지휘권 ▲특검 국수본 사건 이첩 시 특검 지휘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청래 “韓-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시키자”

국회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내달 APEC 시진핑 주석 참석 요청
명동 반중집회 언급도… 韓中관계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수천년 교류와 우정을 이어온 동반자이자,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3년 동안 쌓아온 양국 간 신뢰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한정 국가부주석, 자오러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며 “양국 간 실질 협력의 기반을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 내고, 문화·지방·인재 교류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다음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2024

년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정말 놀랍고 부러운 일”이라며 “국제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점에 ‘인류문명공동체’를 주창한 시진핑 주석의 ‘다자주의 정신’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간 무역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한중간 각자의 수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는 동북아 평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회의에 시진핑 주석께서도 방한하셔서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한중간 관계도 많은 발전이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중관계를 강조하며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반중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아셨는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깡판이자, 업무방해’라 강하게 말씀하셨다”면서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해 집회와 시위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내달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중국은 전력으로 지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오늘 아침 이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인데, 이대통령 지도와 민주당 및 한국 각계 인사들의 지지하에 한국의 대내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대사로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시주석과 우호적인 통화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측은 양국의 교류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7대 핵심 민생부분,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해야”

李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민생회복 첫걸음, 가계 생활비 부담 ↓
KT 소액결제 해킹에 “전모 속히 확인”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1일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면서 “실질적 민생회복 첫 걸음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

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에 만족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며 “언제나 말하지만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 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견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한 통신사에서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정부도 이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선 과잉대응이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